

넥서스 브리프

NB-2026-018 · 가계부채·대출 · 발행 2026년 8월 16일 · 읽기 6분

연체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면 그 빛은 사라지나

은행 장부에서 빠져도 채무자의 상황 의무는 그대로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연체율을 가계의 상환 부담을 재는 지표로 읽지 않는다. 이 비율은 연체채권 잔액을 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이고, 분자는 연체가 줄어도 작아지지만 상각과 매각으로도 작아진다. 2026년 5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낮는데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보다 많다. 두 숫자는 함께 나온 값이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22일 「'26.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발표했다.

항목	값	비고
원화대출 연체율	0.67%	전월 0.61%, 전년 동월 0.64%
기업대출 연체율	0.84%	전월 0.74%, 전년 동월 0.77%
가계대출 연체율	0.45%	전월 0.42%, 전년 동월 0.47%
신규연체 발생액	3.3조원 (신규연체율 0.13%)	전월 2.9조원, 0.12%
연체채권 정리규모	1.5조원	전월 1.6조원
대손충당금적립률	150.4%	2026.3월말, 전분기 160.3%

이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다. 전월 0.61%보다 0.06%p, 전년 동월 0.64%보다 0.03%p 높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월 0.74%보다 0.10%p, 전년 동월 0.77%보다 0.07%p 높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다. 전월 0.42%보다 0.03%p 높고, 전년 동월 0.47%보다 0.02%p 낮다.

같은 달 신규연체 발생액은 3.3조원이다. 전월 2.9조원보다 0.4조원 많다.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0.12%보다 0.01%p 높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5조원이다. 전월 1.6조원보다 0.1조원 적다. 정리규모를 상각과 매각으로 나눈 내역은 이 자료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 자료에서 연체율 상승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은행권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와 충분한 자본·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관이 2026년 5월 29일 발표한 2026년 3월말 부실채권 현황에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0.4%다. 전분기 160.3%보다 9.9%p 낮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연체율은 분수다. 분자는 연체된 채권의 잔액이고 분모는 원화대출 잔액이다. 그래서 이 값이 낮아지는 방법은 둘이다. 새로 연체되는 채권이 줄거나, 이미 연체된 채권을 장부에서 덜어내거나다. 2026년 5월 자료에는 둘이 함께 들어 있다. 신규연체 발생액 3.3조원과 정리규모 1.5조원의 차이는 1.8조원이다. 전월에는 2.9조원과 1.6조원의 차이인 1.3조원이었다.

정리는 상각과 매각이다. 상각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채권을 은행 장부에서 지우는 회계 처리다. 매각은 그 채권을 다른 곳에 파는 것이다. 둘 다 분자를 작게 만든다. 그러나 채무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상각한 채권도 은행은 계속 회수할 수 있고, 매각한 채권은 산 쪽이 회수한다. 은행 장부에서 사라진 채권이 차주에게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을 팔면 차주가 상대하는 곳이 바뀐다. 민법 제 450조는 지명채권 양도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위임을 받은 추심자가 착수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통지에는 추심자의 명칭과 연락처, 채권자의 명칭, 채무금액과 연체기간, 납부계좌가 들어간다.

감독 자료는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한다.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하거나,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다. 충당금을 더 적립하면 그해 이익이 줄고 자본이 준다.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분자가 작아져 지표가 곧바로 낮아진다. 2026년 3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전분기보다 9.9%p 낮아진 상태에서 이 요구가 나왔다.

연체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재는 지표다. 가계가 빚을 갚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재는 지표가 아니다. 두 값은 다르게 움직인다. 2026년 5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1년 전 0.47%보다 0.02%p 낮다. 같은 달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보다 0.4조원 많다. 앞은 남아 있는 잔액의 비율이고 뒤는 한 달 동안 새로 생긴 금액이다. 연구소는 이 둘을 같은 뜻으로 읽지 않는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물리는 사람은 연체가 이어져 자기 채권이 상각되거나 매각된 차주다. 은행의 분자에서는 빠지지만 채무는 남는다. 상각한 채권은 은행이 계속 회수할 수 있다. 매각한 채권은 매입한 곳이 회수한다. 매입 주체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나 유동화 전문회사일 때, 차주가 연락을 받고 서류를 보내는 상대가 달라진다.

3,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고 하자. 은행이 이 채권을 상각하면 은행의 연체채권 잔액에서 3,000만 원이 빠진다. 차주가 갚아야 할 금액은 3,000만 원 그대로다. 매각이면 채권자의 이름만 바뀐다. 신용정보법 제 18조 제 2항은 불이익 정보를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정한다. 기산점은 사유가 해소된 날이지 은행이 상각한 날이 아니다.

상각과 매각은 차주에게 따로 통보되는 절차가 아니다. 은행이 회계 처리를 바꾼 사실은 차주의 계좌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차주가 알게 되는 시점은 대개 모르는 곳에서 연락이 왔을 때다. 민법 제 450조의 통지가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통지가 늦어도 채무는 남는다. 신용정보법 제 39조의 2는 개인이 자기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한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정리규모 1.5조원의 상각·매각 내역은 이 자료에 없다. 상각이 얼마이고 매각이 얼마인지, 매각한 채권을 누가 샀지가 월별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지표는 두 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크기로 반영한다.

- 감독 자료는 부실채권 정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함께 요구한다. 어느 쪽을 얼마나 택했는지는 월별 연체율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의 분류와 월별 연체 통계는 서로 다른 자료에서 나온다.
- 매각된 채권을 산 쪽이 누구인지는 차주가 통지를 받아야 알 수 있다. 민법 제 450 조의 통지는 대항요건이고, 통지가 없었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차주가 먼저 조회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는 구간이 남는다.
- 가계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02%p 낮다. 이 값만으로는 가계의 상환 부담이 줄었는지 알 수 없다. 잔액의 비율이 낮아진 데에는 그동안의 정리도 들어 있고, 자료는 그 몫을 따로 적지 않았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연체 중이거나 연체한 적이 있다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권자변동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한다. 신용정보법 제 39 조의 2 가 개인에게 이 청구권을 준 조문이다.
- 모르는 곳에서 추심 연락을 받으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 통지에는 추심자의 명칭과 연락처, 채권자의 명칭, 채무금액과 연체기간, 납부계좌가 들어간다. 신용정보법 제 27 조에 따라 신분 증표도 함께 요구한다.
- 상각 사실을 들었더라도 채무가 없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남은 원금과 이자, 상환 계획을 현재 채권자에게 직접 확인한다.

금융회사

- 연체채권을 양도할 때 양수인의 이름과 연락처, 남은 채무금액을 차주에게 먼저 서면으로 알린다. 상각한 채권도 채무가 남는다는 점을 같은 문서에 적는다.

당국

- 월별 연체율 자료에 정리규모의 상각·매각 내역을 함께 싣는다. 분자가 작아진 이유를 신규연체 감소와 정리로 나누어 볼 수 있게 한다.

갈림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유도할지, 부실채권 정리로 유도할지. 금융감독원 2026년 7월 22일 자료에 적힌 것은 두 가지를 함께 유도한다는 문장까지다.

A로 가면 · 충당금 적립을 중심으로 감독하면 은행의 그해 이익이 줄고, 연체채권은 은행 장부에 남는다. 차주가 상대하는 곳은 은행 그대로다.

B로 가면 · 정리를 중심으로 감독하면 연체율은 빨리 낮아지고, 매각된 채권의 회수는 은행 밖에서 이뤄진다. 차주가 상대하는 곳이 바뀐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다음 분기 부실채권 현황에서 대손충당금적립률이 150.4%보다 높아졌는지, 아니면 분기 정리규모가 4.4조원보다 커졌는지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제도	채권양도와 추심 채무조정 제도 개관 소멸시효

란	편
	신용점수와 신용평가
금융상품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변동금리형
금융사건	카드 1 억 장이 발급되고 382 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연 164% 이자로 갚은 932 만원이 전액 무효가 됐다 연체율 6.4%가 알려지자 청구에 줄이 섰다
피해 구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불법추심 대응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2026.5 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67%(전월 0.61%, 전년 동월 0.64%)	1 차	금융감독원 「'26.5 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2026.7.22) 원문 전재. 원문 문장 "'26.5 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0.61%) 대비 0.06%p, 전년 동월(0.64%) 대비 0.03%p 상승"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556
기업대출 연체율 0.84%(전월 0.74%, 전년 동월 0.77%), 가계대출 연체율 0.45%(전월 0.42%, 전년 동월 0.47%)	1 차	위 동일. 가계대출은 전년 동월 대비 0.02%p 하락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556
신규연체 발생액 3.3 조원(전월 2.9 조원), 신규연체율 0.13%(전월 0.12%), 연체채권 정리규모 1.5 조원(전월 1.6 조원)	1 차	위 동일. 정리규모를 상각·매각으로 나눈 내역은 본문에 없고 첨부 파일에만 있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556
"연체율 상승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와 충분한 자본·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할 예정"	1 차	위 동일. 원문 마지막 문단 문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556
2026.3 월말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률 150.4%(전분기 160.3%), 부실채권 정리규모 4.4 조원(전분기 5.7 조원)	1 차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 건전경영팀 「2026 년 3 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 (2026.5.29) 원문 전재. 부실채권비율 0.60%, 잔액 17.7 조원, 신규발생 5.5 조원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1821
민법 제 450 조 —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차	한국법제연구원 민법(hseq 55222) 제 450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222&cseq=170924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6 조 —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착수 시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사항에 추심자의 명칭·연락처, 채권자의 명칭, 채무금액과 연체기간, 납부계좌가 포함된다	1 차	한국법제연구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hseq 25375) 제 6 조 조문 원문 확인. 채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동의한 경우는 제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25375&cseq=1557857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신용정보법 제 27 조 —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hseq 63719) 제 27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3719&cseq=2045618
신용정보법 제 18 조 제 2 항 — 불이익을 주는 신용정보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 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1 차	신용정보법 제 18 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3719&cseq=2045590
신용정보법 제 39 조의 2 —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채권을 양수·양도한 경우 채권자변동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1 차	신용정보법 제 39 조의 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조문 원문 확인. 2020.2.4 신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3719&cseq=204564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마련해야 할 내부기준에 채권양도 항목이 있고, 그 내용에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과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이 포함된다	1 차	금융위원회 2024.8.16 발표 원문 전제. 5 개 내부기준 중 채권양도 기준의 내용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이 법의 조문 원문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확인되지 않아 조문 번호를 쓰지 않았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5909
신규연체 발생액 3.3 조원과 연체채권 정리규모 1.5 조원의 차이 1.8 조원, 전월 2.9 조원과 1.6 조원의 차이 1.3 조원	파생	3.3 조원 - 1.5 조원 = 1.8 조원, 2.9 조원 - 1.6 조원 = 1.3 조원. 발표된 두 항목의 산술 차이이며, 연체채권 잔액의 증감액으로 발표된 수치가 아니다
2026.3 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전분기 대비 9.9%p 하락	파생	160.3% - 150.4% = 9.9%p. 원문에 하락폭이 함께 적혀 있으나 계산식을 명시한다
3,000 만원을 상각해도 차주가 갚아야 할 금액은 3,000 만원 그대로라는 예시	파생	가정에 따른 산술 예시다. 상각은 채권자의 회계 처리이며 채무의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금액으로 옮긴 것이고, 발표 자료에 제시된 수치가 아니다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 차 자료	추적 예정
2,556 자	14 건	11 건 (79%)	6 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월별 원화대출 연체율 자료에 정리규모의 상각·매각 내역이 실리는가. 분기 부실채권 현황에서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정리규모가 어느 방향으로 달라지는가. 가계대출 연체율과 신규연체 발생액이 계속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